

韓半島統一과 中國과의 관계

이명수
정치외교학과

<요 약>

세계에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있으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한반도통일에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92년 8월 24일 韓·中國교 수립 이후 한반도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韓中同半者時代가 열려가고 있다. 수교직후 경제교류와 협력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날 수 밖에 없었던 韓中관계는 이제 정치 및 외교분야에까지 폭을 넓혀감으로써 신국제질서 속에서 착실한 협력증진의 기초를 닦아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韓中관계를 북한의 전쟁도발억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이 한반도통일에 차지하는 역할 및 동북아의 영향력 증대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다 강력한 중국'의 위치를 배제하고서는 한반도통일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외정책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의 정책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간등의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또는 궁극적으로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에의 주시하면서 남북한 평화적 통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Connection with China

Lee, Myung-soo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bstract>

As the only divided country of the world, Korea expects China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since the 1992'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have been a close companion to each other for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nd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northeast Asia region. Nowadays, the two countries to expand bilateral partnership in the areas of politics and diplomacy, which solidify the sincere cooperation and exchange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merging new international orders and environments.

Here, we need to concentrate our efforts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stability of northeast region of Asia through the clos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 序 論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중국안보의 제1선으로 간주하여 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滿洲의 산업지대와 華北의 정치적 심장부를 보호하는 전초적 방패이며, 공격적 입장에서는 일본열도 및 태평양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밑에는 中國型 먼로주의(Chinese Monroism)가 작용하고 있다. 戰後 중국은 대륙석권과 정권수립 1년만에 한국전쟁에 개입했고 1953년 휴전협정체결시에는 북한과 함께 협정체결의 일방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한국문제에 관한 제네바정치회담에서 북한, 소련과 함께 공산측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1950년대, 60년대를 특징지운 미국의 對中國봉쇄전략에 강력히 맞서왔다.¹⁾

이와같이 1950년 한국전쟁이래 30년이상 지속된 韓中간의 적대관계는 1971년 10월 유엔 총회에서의 대만의 축출과 동시에 중국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등장,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방문을 통한 美中간의 극적화해에 힘입어 완화되었고 이후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을 인정하는 일대 정책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이념갈등과 영토분쟁관계에 있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美日(특히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였으며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現代化'를 위해서 美日등 서방측의 자본과 기술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지향은 1970년대 후반에 소위 실용주의적 공산주의노선을 추구하는 鄧小平일파가 집권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굳혀져 왔다.²⁾

이러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방정책에 힘입어 韓國과 中國이 修交한지 불과 3년반 밖에 되지 않지만 그간 양국간의 관계발전은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작년 江澤民 중국국가주석의 공식방한(95. 11. 3)의 意味는 각별하였다. 수교후 경제교류의 확대로 지난해 무역량은 약1백70억달러(수출90억달러, 수입80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제3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이 제6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對中투자도 93년 2억달러에서 95년에는 2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 이 논문은 1995년도 대학연구비 조성에 의한 것이다.

1) 金容郁, 「韓民族의 平和統一論」, (서울: 大旺社, 1995), pp. 208~211 참조.

2) 金容郁, 위의 책, pp.208~209.

<표 1> 한·중 경제교류현황

▲ 교역 (단위 : 억달러, 관세청통계)

	92	93	94	95. 6말
교역규모	63.7	90.8	116.6	77.0
대중수출	26.5	26.5	62.0	41.8
	(164.7%)	(94.1%)	(20.4%)	
대중수입	37.2	39.3	54.6	35.2
	(8.3%)	(8.3%)	(39.0%)	
무역수지	10.7적자	12.2적자	7.4흑자	

()은 증가율

▲ 투자 (단위 : 건, 억달러)

	92	93	94	95. 6말	95. 6말 누계
계약건수	269	629	1,059	-	-
계약금액	2.1	6.2	10.6	2.2	21.1
도착금액	1.4	2.6	8.3	1.6	13.9

▲ 인적교류 (단위 : 만명)

	92	93	94	95. 3말
총인원	8.8	15.2	29.8	8.2
방중인사	4.3	11.2	23.5	6.7
방한인사	4.5	4.0	6.3	1.5

이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비롯한 여러 국제무대에서 양국은 정치, 경제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최근 자주외교를 펼치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實事求是를 남북한관계에도 적용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동맹조약으로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긴장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韓半島의 構圖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對中國관계를 修交단계에서 실질적 협력단계로 한차원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제적 질서의 변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역안보 및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冷戰기간 동안 중국은 세력균형 및 反蘇전선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소련 붕괴이후 전략적 초점은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서 지역내 불안정이 그들의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거대한 국토 및 인구, 지하자원,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 증강 등은 중국이 지역안보에 미칠 주요세력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예고해 주고 있다.

80년대 이후 중국경제는 놀란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人民解放軍의 현대화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안보에 대한 중국의 역할 및 기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선택이 요구되고 있다.³⁾ 이는 한반도통일에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시킬 수 없음을 물론이고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의 對韓政策은 그의 세계전략, 국가이익, 장기목표, 대내관심, 대북관계 정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왔으며 한국의 對中政策 또한 중국을 포함한 주변 안보환경 및 역학구도와 관련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왔다.⁴⁾ 따라서 우리의 統一政策도 중국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입장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II. 中國外交政策의 기본방향

중국은 전통적으로 中華主義(Sino-centrism)로 무장된 나라이다. 기원전부터 '세계의 한 가운데 있는 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온 中華의 개념은 타자의 자주성을 중국과 병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천하세계'속에서 모든 문제를 보아왔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외세의 영향아래 놓여 있을 때에도 이러한 정신은 줄곧 유지되었고 중국혁명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도 이른바 '중국적 특색'을 강조하면서 외부세계의 문화를 흡수해 왔다. 현재의 등소평노선도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역할과 기능이 퇴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정책적으로도 실용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중국의 모든외교정책은 '無變이 萬變이다(변화없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정불간섭과 평화공존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용적 경제주의 외교가 중점이 되고 있다. 특히 大中華經濟圈⁶⁾이 중국의 경제적인 요구속에서 나타난다고 볼 때 이러한 추세는 한반도에서 관철될 것이다.

중국은 金日成 死後 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상품가격을 경화결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보편국가의 관계를 모색하는 이중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현저한 위기가 중국 권력계승의 문제를 안고있는 중국의

3) Robert S.Ross, "Introduction : East Asian in Transition", Robert S.Ross ed., East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5, pp.21~22.

4) 李英吉, "「文又承認」以後 韓國의 對中國政策", 韓國國防研究院, 「國防論集」(1995年, 겨울 第32號), pp.20~55 참조.

5) 이회옥, "중국계 자본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대중화 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편,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서울: 도서출판 서울 프레스, 1966), pp.369~998 참조.

6) 대중화경제권 개념은 반드시 화교상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중국경제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다만 중화경제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중화경제권은 국제경제론에서 말하는 제도화된 경제통합(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은 아니며, 서로다른 경제적 실체가 결합하여 대경제구를 지향하는 개념을 말한다.

정치 안정에도 부정적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줄곧 ‘중국 동북지역의 전략적 방벽’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경우 ‘방벽’은 한국, 일본, 미국의 압력을 방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韓中관계는 1992년 중국은 한국을 신흥공업국의 발전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정치적 관계는 여전히 북한변수의 규 정력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통일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제3국의 정치, 군사적 개입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⁷⁾하면서도 한반도의 현상(status quo)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大中華經濟圈을 통해 경제적 외연을 확장하면서 자국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카드를 통한 남북한 동시 장악이라는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⁸⁾ 여기에도 여전히 중화제국의 자기중심적 세계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中國의 아시아정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관된 또 하나의 특징은 경제우선⁹⁾이다.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資本主義發展國家’들로부터 배우고 협력하여 국내에서 자본주의국가들 성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 한국, 대만 및 아세안국가들과 같이 발전된 산업국가들 지향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일당독재를 고수하는 것이다.¹⁰⁾

중국은 아시아에서 하나의 지역세력으로서 경제개혁에 필요한 대외적 자원을 동원하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정치 및 안보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실체는 사안의 성격과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매우 신속성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외교정책의 결정은 쨌저롄(錢基深)외교부장과 같은 기술관료들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內政에서 뿐만아니라 外政에서도 事實求是가 실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中國의 對韓半島시각이면 韓中關係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¹²⁾

첫째,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역전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혁, 개방정책이 저지않은 도전을 받았지만 문화혁명 이전과 같은 폐쇄국가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장차 중국경제는 비교적 안정된 기초위에서 발전할 것이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治理整頓’¹³⁾(치리정돈)과 같은 자체조정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기록한 것처럼 중국 경제의 전망은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에는 지금의 중국공산당 정권을 대체할 어떤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의한 4項堅持原則¹⁴⁾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도 경제자유와 정

7) 朱建榮, “特殊から普通の關係へ進めるか : 中國の對韓半島政策の今後”, 『世界』 (1994年 9月), pp.226~227.

8) 이희옥, 앞의글, pp.395~396.

9) 安秉俊, “東北亞秩序再編의 추세”, 창간호, 『統一研究論叢』 (1992. 6), pp.161~190 참조.

10) 北京(베이징)에서 96. 3. 5개막된 全人大 8기 4차 전체회의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대회에서도 알 수 있다.

11) 安秉俊, 『脫冷戰期の 國際政治와 韓半島統一』 (서울: 범문사, 1993), pp.128~156 참조.

12) 全樂熙, “中國의 軍備增強과 동북아勢力均衡”, 大陸研究所, 『中國研究』, 제3권 2호(1995, 여름), pp.12~27 참조.

13) 1988년 9월 제13기 3중전회 공보로 발표된 인플레이션 이모 인해 야기된 사회불안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9년~1991년에 이르는 기간의 조정정책을 말함. 이붕총리는 당중앙공작회의에서 “지난 3년간 실시해온 경제긴축(治理整頓)정책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종결한다”고 선언하였다.

14) 1880년 6월 제2차 수신사 김홍집 일행이 동경에서 일본과 청나라 외교관들과 접촉하고 있을 때, 러시아의 남침에 대한 대책으로 “防俄羅斯,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지

치적자유가 어느정도 상충된다고 하더라도 공산당 일당독재는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지속되는 한 지금의 개혁, 개방정책은 추진될 것이다. 만일 12억인구와 방대한 영토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고도성장과 중앙통제를 지속한다면 21세기에는 세계최대의 강대국이 될것이라는 예상도 할수 있다.¹⁵⁾

지금까지 중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이념적차원의 대립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경제력, 영토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왔다. 이와같은 목표는 이른바 실용주의 정책노선에 따라 개혁, 개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정책목표는 전통적인 공산주의의 목표에 얽매이지않고 중국의 경제적성장과 영토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영토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은 홍콩과 대만이지만 中國海의 여러군도, 인도의 영토로 되어있는 휘말리아에 대한 영유권, 몽골에 대한 특별권리 및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까지가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중국지도자들은 정치, 군사적 大國化를 시슴치 않으면서 이 봉총리는 “중국은 향후 5년간 국방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순수 방어전략 중심이었던 국방정책을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향할 것”이라고 했다.¹⁶⁾ 중국은 이와같은 방어전략하에서 1990년 이후 제한된 방위예산 아래서도 ‘양으로부터 질로의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¹⁷⁾ 이에따라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의 군사위협을 우려하는 논의가 인접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조차 거론되고 있다.¹⁸⁾

<표 2> 1989~1994년 중국 국방예산 통계표

<단위 : 인민폐/억원>

연 도	국 방 예 산	재정예산 대비	증 가 율
1989	245.50	8.3%	12.63%
1990	289.70	8.6%	15.20%
1991	325.10	8.7%	11.97%
1992	370.00	8.5%	12.12%
1993	425.00	8.99%	13.94%
1994	520.40	9.58%	20.32%

출처 : 『中國時報』(台北), 1994年 3月 12日.

금으로부터 약1세기전 前 駐日 청나라 참사관 황준현의 말이다.

- 15) IBRD의 평가에 따르면, 1992년 중국의 GDP는 2조 6000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IMF에 의하면 같은해 중국의 GDP는 2조 3500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미국 5조 6100억달러 및 일본의 2조 3700억달러에 이어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되었다.
- 16) 『人民日報』, 1993. 3. 16.
- 17) 중국의 국방현대화는 이른바 ‘정간정편(精簡整編)’이라하여 군살빼기를 통한 정예화편성에 따라 11개 군구를 7개 군구로 정비 통합하고 36개 보병군은 24개 합성집단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서방기술의 도입에 역점을 두고 있다.
- 18) 중국문제에 밝은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교수는 최근 그의 특별기고에서 “정치, 외교는 물론 군사면에서도 미국에 대적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1995. 5. 11자 참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한나라의 일방적인 독주나 우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은 예상은 지난번 걸프전때 강대국과 협조하기로 동의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유엔안보리로 하이금 북한의 핵문제 처리에 있어 「의장성명」을 제안한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자는 중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면서도 그들의 현대화계획에 미칠 피해를 우려한 협조라면 후자는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므로써 중국의 位相은 물론, 북한의 후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이중적인 효과를 노린 영향력의 행사라 하겠다.

금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처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혁명적 정치목적 을위해서 행사되기 보다는 민족적인 자존심이나 국가적인 권익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발휘될 것이다.¹⁹⁾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지위획득을 위해 유엔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소극적인 참가보다는 폭넓은 간여를 통해 국제질서의 창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²⁰⁾

III.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李鵬총리의 언급에서 함축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접근과 관련 "중국은 한반도문제를 한반도 전체상황 즉 한반도의 안정유지 및 긴장완화 가능성에서 보아야 할 것"²¹⁾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된 중국은 다음과 같은 관심과 관련있는 동기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중국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뿐만아니라 아무런 준비없는 전쟁에의 개입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 중국의 개입은 엄청난 군사적 대가는 물론, 오랜기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대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일시에 무너진다. 또한 새로운 한국전쟁은 기존의 동북아시아의 균형상태가 파괴될 수 있다.

19) 全樂熙, 앞의글, p.24.

20) 李鵬, 중국총리가 93년 3월 5일 全人大 제1차 본회의에서 행한 「중국 9.5계획 장기목표요강」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15년간 9.5계획기간안에 1인당 국민총생산을 2000년까지 80년의 4배로 2010년엔 2000년의 배로늘린다. 개혁과 발전을 이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鄧小平의 「중국적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이론과 당의 기본노선, 기본방침, 9개 중요지침(9條方針)을 견지,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경제성장방식을 粗方型에서 集約型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목표 2000년의 식량 총생산량은 4억9천만t을 목표 이 기간의 거시통제목표는 연평균 경제성장을 8% 안팎, 고정자산 투자를 30%,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을 이하로 억제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중 9條方針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통일정책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등한 담판과 쌍방의 대표과견후 의견교환을 한다.
- ② 우편교류와 통상, 왕래, 친척방문 및 여행을 실시하며 학술문화, 체육교류의 협의를 한다.
- ③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자치권보유를 인정받고 자체의 군대보유를 인정받는다.
- ④ 대만의 현행사회와 경제제도는 생활방식 및 외국과의 경제, 문화관계도 불변이다. 사유재산과 기업소유권의 합법적인 계승권과 외국의 투자도 침해받지 않는다.
- ⑤ 대만당국과 대표인사들은 국가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 ⑥ 대만과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자원을 받을 수 있다.
- ⑦ 대만인의 본토거주권을 인정하고 자유왕래를 보장한다.
- ⑧ 대만 상공업계 인사의 본토투자과 영리활동을 보장한다.
- ⑨ 조국통일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대만의 각 민족, 인사, 민중단체들의 건의와 의논을 환영한다.

21) 「人民日報」, 1988. 7. 4.

둘째,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일시에 무너짐을 적극 방지할 것이다. 당분간 미래가 불투명한 한반도는 긴장완화 및 현상유지가 중국의 國益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 북한과의 관계는 긴밀하게 지속될 것이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보다 중립적이며 등거리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남한이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존정책은 심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한과의 비공식관계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참가, 남한의 유엔가입 지지 그리고 국교수립단계에 이르면서,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리적이며 중립적인 정책을 추구해 왔다. 중국은 자신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겨 줄 북한의 어떤 '시도'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스스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자유경제체제의 출현에 대하여 대체로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임박하였으며 중국은 이미 '꾸며진 상황'에²²⁾ 대비하는 것이 현명함을 알고 있다.

韓中關係 主要日誌

△ 1991. 1.	大韓貿易振興公社 北京代表部 設置
△ 1992. 8	韓中修交
△ 1992. 9	盧泰愚大統領 訪中
△ 1993. 7	上海總領事館 設置
△ 1993. 9	中國釜山總領事館 設置
△ 1994. 3	金泳三大統領 訪中
△ 1994. 9	青島總領事館 設置
△ 1994. 10	李鵬總理 訪韓
△ 1995. 4	喬石全人大 常務委員長 訪韓
△ 1995. 5	李洪九國務總理 訪中
△ 1995. 11	江澤民主席 訪韓

특히 92년 8월 24일 韓中양국 국교수립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1950년 이후 지속되어온 냉전관계를 우호협력관계로 전환시켰다. 수교당시만 해도 외교관계 정상화 자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현재는 관계정상화 단계를 넘어 국제적 이해관계에 공동대처하는 동반자관계로 진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95. 9. 25일 孔魯明외무장관이 공개한 北·美平和協定 반대입장²³⁾은 중국이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現 停戰협정체제는 유효하며 미국과 북한만의 새 평화협정추진에 쉼표를 박음으로써 그동안 북한측의 주도로 움직여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비로소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2) “北京與漢成均懿陽天,” 『亞洲週刊』, 1994. 11. 13, pp.41~48.

23) 공노명 외무장관이 제5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여(95. 9. 25) 「중국은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체결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당시 중국이 우리측에 통보해온 내용에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impossible)하고 비현실적(unrealistic)이며 불합리(irrational)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음을 공개하였다.

이는 북측의 평화협정공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대응으로 전환한 우리측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2+2방식 등 남북한 당사자와 관련국 참여방식의 平和體制 구축을 위한 여건이 점진적으로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측의 이같은 입장을 공표할 수 있었던 것도 양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北·美간 새 협정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랜 共產血盟인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한반도문제를 직접 협의, 결정하는 것과 이에따라 이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증대에 제동을 걸어 앞으로 새 平和體制구축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중국측의 노선이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중국은 95년 6월 黨政 고위대표단을 북한에 파견 「북한의 새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北·美간의 직접적인 협정체결은 원래 중국측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미 95년초부터 비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다. 북한은 이것 때문에 경제인교류, 평양축전참가, 수교접촉 등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해 「다이완카드」를 사용해 왔다. 중국은 이를 견제하고 새로 출범할 金正日정권의 親美化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에 「한국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은 앞으로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남북한 양쪽의 손을 들어주는 二重政策을 취할 전망이다.

중국의 이와같은 등거리노선은 95년 12월 停戰委 중국대표단 철수에 관한 입장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났다. 정전협정체결 당사자인 중국이 대표를 철수시켰으므로 이 협정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지만 중국은 우리측에게 정전위대표단을 조정키위해 이동했다고 표현하였으며 아직 대표단이 베이징(北京)에 존재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입장은 한국을 배제한채 對美協商을 고집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측의 이익확보목적에서 마련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북한공산주의체제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겉으로는 등거리외교를 표방하는 政策을 고수할 것이다.

1. 中國의 對 韓半島 統一觀

중국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화해, 협력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며 남북한 통일실현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반도통일 자체가 긴장완화를 보다 증진시키거나 정착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통일의 달성보다는 통일에 이르는 긴장 완화의 해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 및 韓中間의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감안한다면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불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통일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게 될 보다 강력한 독자적인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정책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²⁴⁾ 그러므로 한반도통일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서는 최대관심사중의 하나이다.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²⁵⁾가 중국의 고심

24) Robert S. Ross, "China and the Stability of East Asia". Robert S. Rose ed., East Asia in Transition : Toward a New Regional Order, ISAS, 1995, p.111.

25) Algerd D. Wilhelm, Jr., "Sino-Korean Relation : The Year After", The Korean Journal of

거리이다.

중국은 무력에 의한 통일한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통일한국을 선호할 것이나 명백한 체제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경제개혁과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급히 서둘러 않으면서 남북한 쌍방은 이에 적용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장기간 누적되어 온 정치적, 군사적 대치 및 상호불신으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의 모순과 대립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和解와 統一'은 동의어로 간주되며 화해는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이다. 중국은 화해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그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지한다. 더구나 최근의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통일에 간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南과 北 가운데 어느 한쪽의 붕괴를 가져오는 '월남방식' 혹은 흡수통일적인 '독일통일방식'은 외세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韓民族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²⁶⁾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2. 中國과 北韓과의 관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일본, 러시아, 미국 및 한국사이에 있는 전략적 완충지로 여겼던 것이다. 美, 中 및 中, 러관계가 향상된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을 자기 영향권에 두면서 하나의 정치적 동반자로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정책상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달성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中國의 北韓에 대한 역할이 필요함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中國은 北韓의 정치적 견해에서는 이해관계가 같으면서도 중국지도층은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관한 한 북한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테러행위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동조할 수 없다든지 한국과의 경제교류, 스포츠 및 다른 분야의 접촉은 계속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쌍무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고 한반도의 안정문제를 거론해 왔다.²⁷⁾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사실상 對美관계에서 한반도문제가 종전과 같이 양국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오히려 더욱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 한 이상 북한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를 극대화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북한도 中, 러간의 줄다리 외교를 실시하여 과거와 같이 실리를 챙길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서 金日成이 사망한 뒤에도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하기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태도는 계속 견지해 가고 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UN에 가입시키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것과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을 것을 종용했을 것이며 점진적으로 무역도 경화로 결재할 것을 북한측에 통보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해소와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협조를 북한에 권고했을 것이다.

Defense Analysis, Vol. IV, No.1, Summer 1992, p.99.

26) 李英吉, 앞의 글, pp.45~46.

27) Byung-joon Ahn, "North Korea and the U.S. in Global and Regional Perspective", in Robert A. Scalapino and Lee Hong-koo(eds.), *Nor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 (Berke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pp.284~300.

中國政府도 북한이 중국과 같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과감히 실시하여야만 사회주의체제를 방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전환을 시켰을 것이다. 金日成이 중국을 방문한 뒤에 '두만강개방계획'에 북한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북한은 92년 1월 羅津과 先鋒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²⁸⁾

중국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중요한 동반자임에도 분명하지만 중국의 대외정책에서는 북한과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분명한 점은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속해 생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 중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鄧小平도 "이제는 모든 것이 북한과는 같을 수 없다"는 표현은 남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시대에 들어와서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추진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시대의 구체적인 대외정책도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매우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도 국제사회에서 조성되고 있는 평화적인 화해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한 수세적 외교기반을 만회하는 한편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면서 체제유지와 발전을 추진하려는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김정일체제는 대외관계에 대해 종래와 마찬가지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크게 두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일이고 둘째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이후의 외교적 손실을 만회하면서 외교적기반을 확대해 나가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김일성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는 계속해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은 김일성사망 직후부터 김정일체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쌍방관계에 대해 代를 잇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이에따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원하는 배후세력으로 영향력을 미쳐왔으며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 식량원조와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국내발전을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김정일체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와 경제난을 타개하는 거점국가로 중국을 적극 활용할것으로 보인다.²⁹⁾ 또한 북한은 국내에서 金正日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 취체되고 있는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美日과의 관계개선을 갈망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속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더 많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더 많은 공동이익을 지니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교류 및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과는 기존의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 중국의 태도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구 소련에서 공산당과 연방이 와해되고 天安門사대 이후 서방국가들로부터의 경제봉쇄 및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아시아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 확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에 돌발적인 사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은 피하면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고 동남아 국가들과도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2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16, 1992, pp.16~20.

29) 정현수, "김정일체제의 '우리식사회주의'에 대한 전망", 平和問題研究所, 「統一問題研究」, 第七卷2號(1995, 하반기), pp.103~104.

하나로서 중국은 UN 및 亞·太經濟協力體(APEC)와 같은 다변적기구와 경제교류에 있어서 한국과도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과 중국은 다변적인 경제교류를 통하여 북한을 상호의존된 경제관계에 참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韓國과 中國은 이런 점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의 단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韓中間에 노력해야 할 과제로서는 북한을 빠른 시일내에 국제적 고립과 폐쇄된 사회에서 개혁과 개방된 세계쪽으로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韓中間의 진전되는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는 中國측에 이의 기대를 예견해 볼 수 있다.³⁰⁾ 왜냐하면 중국이 첫째, 중국과 북한간에 1961년 7월 11일에 체결된 「中·朝 상호 원조조약」 제1조에 '아시아와 세계평화 수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제4조에는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북한간에는 900km이상되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예기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여파는 중국에도 파급될 수 있으며, 중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개방정책과 경제발전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과의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북한정권수립 이래 줄곧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이며 金正日의 권력승계 안정에도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이다.

넷째,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로서 1978년 이후의 중국의 상황을 북한은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국은 북한이 의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유일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이 상과같이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중국의 우정어린 對北韓 충고와 설득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韓中間의 외교적협력은 양국의 입장과 상황을 존중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 평화통일촉진에 격의 없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IV. 韓中關係 변화전망

전세계의 관심은 중국의 최고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死後 중국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통일정책 수립에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쑨원(孫文), 장제스(蔣介石),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에 익숙했던 중국정치가 그와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의 상황전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³¹⁾

鄧死後 몇 년간은 장쩌민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체제로서 정권의 안정을 기하면서 개혁 개방의 정책을 계속해 갈 것이다. 공산당은 집권당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나 공산주의이념

30) 이지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간의 외교적 협력방안", 한국외교협회, 「외교」(제 28호, 1993. 12), pp.102~107 참조.

31) 중국정치는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서보다 지도자 개인의 통치이념에 좌우되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성향을 지닌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장래 누가 권력의 핵심부가 될 것인가가 중국정치노선의 향방을 조망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지도부는 덩샤오핑지도하에 개혁파와 보수파간에 타협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 대한 집착은 사라져서 대만의 국민당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영기업에서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소유권은 형식상 全人民 소유로 남아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기업처럼 운영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한국발전 모형처럼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사회는 다원화되고 경제는 시장경제화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중국의 신지도층을 형성하는 관료기술층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를 볼 때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韓半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에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외교력을 잠식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문제 등으로 예민해진 중국은 자신과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상당한 영향력으로 다가서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채 미국과 단독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표면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동안 좌시해오던 북한의 對美平等協定外交에 세동을 걸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것은 이미 지적한바 있다.³²⁾

이제 세계에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一國二體制(one nation two systems)의 유연한 통일방안을 대만측에 제시하여 중국통일에 주도권을 행사하여온 중국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반도통일에 직간접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비록 한국과 중국의 분단과정과 현실적 여건이 다르다할지라도 덩샤오핑이 보여준 탄력적인 운영과 자신감있는 對 대만정책은 남북한간에 일체의 집착조차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족통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있는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철저한 政經分離主義에 입각 정치적, 군사적 분쟁관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중국과 대만간의 경제관계는 꾸준히 증가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노선은 한국정치라는 이질적 상황과 배경하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가에 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다. 특히 統一問題와 연관되어 사회주의체제를 골간으로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중국적 사회주의는 향후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되는 경우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남한의 자본주의체제와의 절충적 형태가 필요한 경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과거 외교정책에서는 주체와 동거리외교를 구사했지만 실제적인 사회주의 현대화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을 답습했고 최근에는 중국식의 개방과 개혁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사회주의 발전과 전개방향을 가늠해 보는데 있어서도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³³⁾

V. 結 論

현재까지 한국의 운명은 한반도를 둘러싼 四強의 권력구조 및 세력경쟁의 틈바구니속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국주의 권력구조(1880~1945)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제국주의 세력들의 세력균형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냉전양극체제(1945~1960)에서는 東西冷戰의 완충지대로 국토가 분단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맛 보았다. 긴장완화 다극체제(1969~1990)에서는 한국은 강대국들의 긴장완화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단상황이 고착

32) 이정우, "남북한 평화협정의 새로운 변수, 중국-중국의 북·미평화협정반대와 의미-", 「통일한국」 평화문제 연구소(1995. 11), pp.24~26.

33) 金榮華, "덩소핑의 政治리더십의 한 연구, 개혁적리더십의 형성을 중심으로-", 大陸研究所, 「中國研究」(1994. 가을), pp.124~125.

되어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강대국들에게는 긴장완화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구적, 평화적 구조상태가 그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냉전의 분단상태를 계속 지나게 한채 평화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운명은 四強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유지를 위한 국제정치체제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어온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냉전 양극체제와는 달리 四強-多極和解協力體制에서는 남북한의 국제정치적 행위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진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한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한 직접-중심국가 행위자로 변모하였다. 그러므로 장차 한반도문제 해결은 남북한당사자들의 상호협력관계에 의해서 해결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다극체제하에서 四強들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四強들은 남북한정부가 통일을 달성하는데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긴장완화와 균형 즉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는 견제하겠지만 평화적 통일은 지지할 것이다.

金日成死後 및 四強들의 긴장완화 분위기가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당사자들은 통일의지의 부족으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國內外상황을 고려 內的으로는 통일의 필요성과 열망을 조성케 하고 外的으로는 四強의 화해분위기를 이용,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본 논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표명은 한반도통일 달성에 건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政經分離原則을 고수하는 중국의 정책을 심분활용, 북한과의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을 통한 직접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南北韓 어느한쪽에 다른쪽에 귀속시키는 통일은 상상할 수가 없다. 통일은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력을 뒷받침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 달성되도록해야 한다.

중국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 북한도 변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을 더욱 필요함을 북한은 인지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하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관계가 서서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가 급속히 변하고 있음에도 유독 북한만이 문을 닫고 있다. 시간의 흐름앞에는 그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정부도 북한을 구석진 곳에만 몰아넣지 말고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는 양지바른 곳으로 끌어내어 한반도 안전과 평화통일에 기회가 옴을 서서히 간파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 金容郁, 「韓民族의 平和統一論」(서울 : 大旺社, 1995).
- 曹明鉉, 「국제정치 정치적으로 본 한국의 운명」, (서울 : 교학연구사, 1996).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서울 : 도서출판, 서울프

- 레스, 1996).
- 安秉俊, 「強大國관계와 韓半島 安保論」(서울 : 법문사, 1989).
 - 安秉俊, 「脫冷戰期の 國制政治와 韓半島統一」(서울 : 법문사, 1993).
 - 金樂熙, “中國의 軍備增強과 동북아 勢力均衡”, 大陸研究所, 「中國研究」, 제3권2호 (1995, 여름).
 - 李英吉, “交叉承認以後 對中政策”, 韓國國防研究院, 「國防論集」, (1995, 겨울 제32號).
 - 이정우, “남북한 평화협정의 새로운변수, 중국 - 중국의 북·미평화협정 반대와 의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1995. 11)
 - 정현수, “김정일체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 平和問題研究所, 第7卷2號, 「統一問題研究」(1995, 하반기)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1996. 1)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1996. 3)
 - 大陸研究所, 「中國研究」(1994. 겨울)
 - 大陸研究所, 「中國研究」(1995. 봄)
 - 大陸研究所, 「中國研究」(1995. 여름)
 - 平和問題研究所, 「統一問題研究」, 第6卷1號, 91994, 여름)
 - 平和問題研究所, 「統一問題研究」, 第7卷1號, (1995, 상반기)
 - 한국외교협회, 제28호, 「외교」(1993. 12)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제1호, (1994, 봄, 여름)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11권 제1호, (1995. 봄, 여름)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11권 제2호, (1995, 가을, 겨울)
 - 이지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간의 외교적 협력방안”, 한국외교협회, 「외교」(제28호, 1993, 12).
 - 金榮華, “등소평의 政治리더쉽의 한 연구 - 개혁적 리더쉽의 형성을 중심으로-”, 大陸研究所, 「中國研究」, (1994. 가을)
 - Melvin Gurtov, “China : The Politics of the Opening”, Asian Perspective, Vol.12, No1(Spring - Summer, 1988).
 - Robert S.Rose, “China and the Stalility of East Asia”, Robert S.Rose ed., East Asia in Transition : Toward a New Regional Order, ISAS, 1995.
 - Alferd D. Wilhelm, Jr., “Sino-Korean Relation : The Year After”,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nalysis, Vol.IV, No.1 Summer, 1992.
 - William H. Obverholt, China : The *Next Economi Super Power*(London : Weinfeld & Nicolson, 1993), pp.216~224.
 - 朱建榮, “特殊から 普通の關係へ進めるか : 中國の對韓半島政策の今後”, 『世界』(1994. 9).
 - Byung-joon Ahn, “North Korea and the U.S. in Global and Regionol Perspective”, in Robert A. Scalapino and Lee Hong-koo (eds.), *Nou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Berk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16, 1992.